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

정은미(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공간(公刊) 문헌에서 유기농업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쿠바의 유기농업 경험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유기농업 정책은 단순히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견된다. 쿠바와 북한이 공통적으로 대외적 고립과 수입 영농자재의 부족과 같은 유사한 상황적 제약 속에서 유기농업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쿠바와 달리 북한은 집단농업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유기농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에서는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유기농법에 의거한 가족농이 십수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영농 조건 속에서 농업 증산을 위한 수단으로 시작하여 유기산업법의 제정 및 생태환경의 보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담론이 진화해왔다. 또한 유기농법에 대한 북한의 초기적 관심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방법의 유기비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외부 세계의 유기농업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관심의 폭을 넓혀갔다.

* 이 연구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0-361-A00017).

그동안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농업교류협력은 주로 북한의 농업정책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화학화와 기계화를 기반으로 한 남한의 관행농법의 영농기술과 자원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은 한반도 차원에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촌과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일농업의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북한 정권이 관심을 보이는 유기농업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유기농업, 관행농업, 남북농업교류협력, 식량주권, 생태, 가족농, 통일농업

1. 들어가며

1950년대에 미국의 주도로 시작된 ‘녹색혁명’은 1970년대 발생한 세계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데 분명히 크게 기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녹색(생태)을 파멸하는 녹색혁명이 되고 말았다.¹⁾ 이에 비판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식량주권 개념이다. 2007년 2월 23~27일에 말리(Mali) 닐레니(Nyeleni)에서 개최된 식량주권 포럼에서 공포된 닐레니 선언(Declaration of Nyeleni)에 의하면,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생산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²⁾ 식량주권의

1) 권영근, “식량 위기에 얽힌 진실과 대안,” 『환경과생명』, 통권 59호(2009, 봄호), 214쪽.

2) <http://www.nyeleni.org/spip.php?article333>.

개념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산물의 자유무역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특히 중소농, 무토지 농민, 여성 농민, 농업노동자 등—이 모여 비아 캠페시나(Via Campesina)라는 초국적 사회운동조직에서 수년간의 토론을 거쳐 1996년에 창안되었다.³⁾

식량주권의 개념은 1970년대 초에 발생한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개념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등장하였는데, 기존의 식량안보 개념이 초기에는 식량자급에 기초한 증산정책과 농업보호정책을 강조했지만 점차 무역(=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여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⁴⁾ 피터 로셋(Peter Rosset)은 “식량안보는 아이, 여성, 남성 모두가 매일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개념에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⁵⁾며 식량안보 개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식량주권을 주장한다.

비아 캠페시나에 따르면 식량주권은 국가적으로 충분한 양의 먹거리 생산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가, 어떻게 생산하는가, 어떤 규모로 생산하는가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게 본다.⁶⁾ 특히 비아 캠페시나가

3) 송원규·윤병선,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 위기-대안의 모색: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농촌사회』, 제22집 제1호(2012), 290쪽.

4) 송원규·윤병선,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 위기-대안의 모색: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289쪽; 장경호, “식량안보인가, 식량주권인가?,” 『민중의 소리』, 2012년 11월 1일.

5) Peter Rosset, “Food Sovereignty: Global Rallying Cry of Farmer Movements,” *Backgrounder*, Vol. 9, No. 4(Fall, 2003), p. 2.

제시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7대 원칙’ — 기본 인권으로서의 먹거리, 굶주림의 세계화 끝내기, 농업개혁, 먹거리 무역의 재조직, 민주적 통제, 전제 조건으로서의 사회평화, 자연자원의 보호 — 을 통해 확인되는 바처럼, 식량주권은 단순히 먹거리 및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와 생태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가치들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도 충분히 접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식량주권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농업모델은 근대적 관행농업이 아니라 소농 또는 가족농 중심의 전통적 농경 — 특히 유기농 — 방식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식량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대안적 농경은 다각적 영농으로 단작을 대체하고, 다양성으로 단일성을 극복하며,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 천연비료와 생물학적 해충 방제를 통해 자연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대신에 자연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비교해 설명하면,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은 집중화, 의존, 경쟁력, 자연에 대한 지배, 전문화, 착취 등을 특징으로 한다면, 대안 농업의 패러다임은 탈집중화, 독립,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 다양성, 규제(혹은 안전장치) 등을 특징으로 한다.⁷⁾

이미 남한에서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대안적 농업모델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공간(公刊) 문헌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강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인민의 기초적인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 유기농업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낯설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한 주민에게조차 유기농 제품이란

6) 아네트 아우렐리 데스마레이즈(Annette Aurelie Desmarais), 『비아캄페시나: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대구: 한티재, 2007), 72쪽.

7) 위의 책, 136~138쪽.

일부 제한된 계층만이 소비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근에 허덕이는 북한에서 유기농업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갖고 있다. 남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작되었다면, 북한에서는 장기화된 경제봉쇄 속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증산의 지구책의 하나로서 유기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쿠바는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응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화학화·기계화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중앙집권적 관행농업을 대신하여 가족농 중심의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식량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역시 오랜 기간 미국의 경제봉쇄에 직면하고 있지만 쿠바의 사례와 같이 근본적으로 농업생산체계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넘어 핵 보유를 체제수호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외부 세계의 대북 경제봉쇄가 쉽게 해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인 농업 증산의 수단으로써 유기농업 방식은 분명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한 간에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여기에는 농업 분야의 교류협력도 포함된다. 농업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그동안 화학비료, 농약, 비닐, 농기계 등과 같은 영농자재와 영농기술의 지원을 통해 북한 스스로 농업 생산력을 복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10년 넘게 추진해온 남북 농업교류협력에는 통일 대비 농업공동체의 형성이나 통일된 한반도 농업의 미래상과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 없이 당면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를 돕고 식량 생산능력의 복원을 위해 남한이 일방적인 농업 자원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업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남한의 관·민 모두 북한 지역의 토양 산성화와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여 현대화된 농기계 및 영농자재의 충분한 투입 없이 현재의 농업체제와 농업기반으로는 식량 증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남한의 관·민이 추진해온 대북농업교류협력 방식은 기존의 생산 구조를 복원하거나 보조(補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통일의 선상에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구체적으로는 통일된 한반도의 농업 방향성에 대한 남북한의 공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의식하에서 이 글은 우선, 쿠바가 세계적인 유기농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된 역사적·정치경제적 맥락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의 실천적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쿠바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쿠바의 경험은 북한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유기농업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기농업 정책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북한 문헌의 검토를 통해 유기농업과 관련된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히 검토해보고 또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기농업의 실태는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선 유기농업과 관련된 담론(또는 이데올로기)과 실천 간의 간극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간극은 어쩌면 쿠바의 경험을 통해서 도출된 북한의 유기

농업이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또는 제약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전반을 성찰해보고 대안적 비전의 관점에서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의 유기농업 정책을 포함하여 통일 한반도의 농업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농업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쿠바의 유기농업 전환 경험과 북한의 적용 가능성

북한이 공간 문헌을 통해 유기농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지도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쿠바가 대외관계의 봉쇄 속에서 식량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화학화·기계화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행농법을 포기하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것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며 쿠바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아직까지 학계를 비롯하여 남북농업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쿠바가 세계적인 유기농업의 메카로 떠오르기 이전에 쿠바 농업은 혁명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고 사탕수수과 같은 단작재배체제로 초기부터 대규모 기계화를 통한 영농방식이 발달하였다. 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쿠바의 농업은 1,000헥타르당 21대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최고의 수준이었으며 화학비료 투입량은 미국보다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의 근대 농업을 지탱했던 농업자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농약 98%, 화학비료 94%, 가축사료 97% 등 종자에서 트랙터와 연료,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공급해주었다. 그러나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사탕수수 위주의 단작농업체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사탕은 1980년대 쿠바 수출액의 80%를 차지했는데 소련의 구매 능력이 없어지면서 수출길이 막혔고, 사탕 국제가격이 급추락하면서 농자재나 석유 등의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농자재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 영향으로 설탕 생산량도 1989년 810만 톤이었던 것이 매년 크게 줄어 1995년에 336만 톤으로 급락했다.⁸⁾

농자재의 수입이 급락하면서 쿠바의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미국은 이 기회에 카스트로(Castro)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1961년부터 지속해온 경제봉쇄를 더욱 강화했다. 1992년에 미국 의회는 국내외의 미국계 기업 및 모든 자회사가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톨리체리법(Toricelli Act)’, 이른바 ‘쿠바 민주화법’을 제정했다. 당시 러시아를 비롯해 소련붕괴 후 탄생한 신생국들은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했는데, 그에 대해 미국이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쿠바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93년 3월에는 금세기 최악이라는 허리케인이 급습하여 쿠바 혁명 이후 처음으로 쿠바는 국제사회에 긴급 원조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수입량은 1989년에 1,330만 톤이었지만 1993년에는 약 570만 톤으로 줄었다. 석유뿐 아니라 원료, 기계 등의 부품마저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공장은 차례로 문을 닫았다. 1993년 말까

8) 요시다 타로(吉田太郎),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작은 나라 쿠바의 커다란 도전, ‘늘 푸른 혁명’』(파주: 들녘, 2004), 37~39쪽.

지 공장의 80%가 폐쇄되었고,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어 실업률은 40%에 이르렀다. 식량을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농약, 화학비료, 트랙터 연료 등 생산자재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였다. 1989년에는 130만 톤 이상의 화학비료, 1만 7,000톤 이상의 제초제, 1만 톤 이상의 농약이 수입되었지만 1992년에는 화학비료는 23% 줄었고, 살충제는 60% 이상 감소했으며, 가축사료도 200만 톤에서 47만 5,000톤으로 줄었다. 석유 부족으로 1991년 11월에는 이미 농업용 트랙터의 12%가 가동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절반가량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⁹⁾ 또한 연료 부족으로 관개용 펌프와 콤파인도 정지해버렸다. 이렇게 하여 농업 생산은 1992년에 10%, 1993년에는 23%, 1994년에는 1990년 기준으로 55%까지 감소했다.¹⁰⁾

이렇게 하여 식량위기가 나라 전체를 흔들었으며, 카스트로(Fidel Castro)는 ‘평화시의 특별 기간’, 곧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나라를 전시의 경제통제 아래 두었다. 아사자가 속출할 위기의 순간 아바나 시민이 선택한 비상 수단은 도시를 경작하는 것이었다. 일명 ‘도시농업’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시민에게 국유지를 빌려줌으로써 1993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 도시의 버려진 땅이 개간되고 쓰레기장이 채소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아바나시에만 3만 이상의 공동체 텃밭이 생겨났고 전역에 100만 이상의 공동체 텃밭이 생겨났

9) 1990년 쿠바는 총 8만 5,000대의 트랙터를 사용했으나, 1990년 수입석유의 공급이 60%까지 감소하자 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트랙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1997년에 트랙터 7만 3,000대를 활용했으나 2000년에는 4만 대로 줄었고 2012년에는 100km²당 203대만 남았다. 트랙터 사용이 줄어든 대신에 쿠바의 농업에서는 73만 5,000마리 이상의 가축이 활용되고 있다. Eduardo Francisco Freyre Roach, “쿠바의 유기농업과 한국에서의 적용,” 2012년 한국유기농업학회 국제심포지엄, 『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전망』(2012.10), 60~61쪽.

10) 위의 글, 41~43쪽.

다. 이 텃밭은 식량 생산이 최우선으로 되었다.¹¹⁾ 그리고 도시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의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유기농업으로 진행되었다. 화학비료는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로 대체되고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 농약이 이용되었다.

도시농업 운동은 결국 쿠바의 대규모 국영관행농업체제를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유기농업 체제로 전환시켰다. 대규모 국영농장은 대부분 개별 가족농과 협동 경영으로 쪼개져 철저히 지역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농법 그리고 자연생태계 및 현대 과학기술과의 연계에 바탕을 둔 21세기형 유기농운동이 전개되었다.¹²⁾ 이렇게 하여 사탕수수와 방목지를 제외한 약 190만 헥타르 경작지의 8할이 유기농업이나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폭 줄인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전에 130만 톤 가량 수입되던 화학비료도 2001년에는 약 16만 톤만 수입되고 농약 역시 같은 해에 1,900톤밖에 사용되지 않았다.¹³⁾ 이와 같은 농업개혁의 과정을 거쳐 결국 쿠바는 식량자급률이 유기농업 운동 시작 이전의 43%(1990년)보다 훨씬 높은 95%(2002년) 수준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¹⁴⁾

쿠바가 유기농업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11) 스테판 유니스(Stephen Zunes), “쿠바는 녹색국가가 되는가,” 『녹색평론』, 제67호(2002), 137~141쪽.

12) 김성훈, “쿠바는 어떻게 식량위기를 벗어났나?: 쿠바의 유기농업 성공이 북한에 주는 교훈,” 제7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니눔센터 정책포럼(2004. 8.19), 2쪽.

13) 요시다 타로(吉田太郎), “유기농업으로 나라가 변한다,” 『녹색평론』, 제67호(2002), 107~136쪽.

14) 요시다 타로(吉田太郎),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작은 나라 쿠바의 커다란 도전, ‘늘 푸른 혁명’』, 6~7쪽.

있는데, 쿠바는 1959년 혁명 이래 대학까지 무료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33개에 이르는 등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유기농업의 기술 개발에 동원되었고, 연구자들은 탁상공론이나 실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지의 농민과 얘기를 나누고 현장에서 최첨단 바이오기술과 재래농법을 결합시켜 자재가 부족한 가운데서 실천 가능한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그 결과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 만들기, 미생물 비료의 개발,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 각종 곰팡이나 식물 엑기스로부터 얻은 바이오 농약, 먹고 남은 음식을 사료로 전용한 순환형 축산 등 각가지 유기농법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쿠바의 식량위기 극복을 단순히 영농방식을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저투입 생태적 생산방식으로 농업을 개편한 쿠바 정부는 1993년 중반에 이르러 복잡한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수입 농자재의 대부분을 입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시 전체 농지의 20%정도를 차지하던 소농 부문은 높은 효율을 내며 저투입 생태적 농업에 적응해간 반면 전체 농지의 80%를 차지하는 집단 부문(국영농장과 협동농장 포함)은 새로운 대체 농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1993년 9월 쿠바 정부는 효과적인 유기농업에 필수적인 소규모 경영 단위를 조직하기 위해 농업생산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이 개편의 핵심은 국영농장을 농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국영 농장을 폐지하고 이를 노동자들이 소유한 기업 또는 협동조합인 UBPC (unidades basicas de produccion cooperativas, 협동생산 기초 조직)로 개편했다. UBPC는 정부에 의무적으로 주(主)작목 중 일정량을 납부하기만 하면 나머지 농산물은 농민의 몫이었고, 농민들은 초과생산한 농산물

을 농민시장에 판매하였다.¹⁵⁾ 이처럼 쿠바의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과 식량위기의 극복 배경에는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전환뿐만 아니라 집단농장의 구조적 개편이 함께 병행됨으로써 가능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것은 최근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유기농업 정책이 과연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임시방편의 정책 제안으로 그칠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쿠바의 유기농업이 성공한 요인을 요약해보면 첫째, 사적 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둘째, 직거래 유통 중심의 시장개혁(농민시장의 개설), 셋째, 지렁이 분변토, 토상농법, 각종 토착 미생물과 생약 및 천적 개발 보급, 실용적인 흙살리기운동, 넷째, 유축농법 등 현지 자원의 재활용과 윤작, 간작, 휴경작 등 순환농법의 정착, 다섯째, 전통농업 기술 및 자재의 생물학적 현대과학기술과의 성공적인 결합, 여섯째, 농민참여하의 현장 연구와 농가 적용시험의 중시 등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쿠바의 유기농업의 시작은 ‘강제된 선택’이었지만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쿠바 시민의 자발적 참여, 일반 소비자의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의 과학자와 연구기관의 협작 등으로 인해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로써 쿠바는 과감히 근대 화학농업을 버리고 친환경 유기농법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생태보전과 생산성 향상 — 요약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 — 이라는 21세기 인류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

15) 프레드 맥도프(FredMagdoff)·존 포스터(John Bellamy Foster)·프레드릭 버텔(Frederick H. Buttel), 『이윤에 굶주린 자들』(서울: 울력, 2011), 310~316쪽.

16) 김성훈, “쿠바는 어떻게 식량위기를 벗어났나?” 3쪽.

17) 위의 글, 2쪽.

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쿠바의 유기농업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김성훈은 한편으로 화학농업에 찌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환경생태계의 극심한 오염에 시달리고 다른 한편으로 수입 개방으로 쓰러져가는 남한의 농업에, 그리고 아직도 ‘우리식’ 주체농법의 통제하에 수백만의 아사자를 배출하고 있는 북한의 농업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주장한다.¹⁸⁾ 또한 그는 남북한이 협력하고 친환경적인 유기농업을 통해 북한이 식량 증산과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을 중장기적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남북한 간의 농업협력 분야의 하나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자재, 기술, 그리고 가공 및 유통 분야의 협력을 중요한 의제로 제안한다.

김연철은 쿠바의 사례를 두 가지의 측면, 즉 집권적 농업체제의 개혁모델이라는 점과 유기농법이라는 점에서 북한 농업개혁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 주목하였다. 그는 북한이 당분간 정치적 필요로 인해 중앙집권적 농업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면서 인센티브 강화와 분권화, 그리고 농민시장의 허용 등을 요지로 하는 쿠바의 국영농장체제의 개편이 현실적으로 북한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였다. 동시에 장기적인 농업발전 목표로서 기계화를 중심으로 한 집체농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에너지의 부족과 농자재 관련 산업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쿠바와 같이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¹⁹⁾ 이와 함께 그는 남북한의 유기농업 협력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생물 비료를 포함한 바이오

18) 위의 글, 5쪽.

19) 김연철, “집권적 농업체제의 개혁: 쿠바의 농업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2호(2002), 136~137쪽.

농업의 기술과 재래 농업의 특징을 결합한 공동 연구와 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한 지역을 유기 농업 지역으로 육성하는 농업분업체계의 형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²⁰⁾ 김연철의 논문은 쿠바의 유기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나 북한의 유기농업 전환 가능성 등의 서술까지는 진척되지 않았지만 남북한의 유기농업 협력 방안이나 한반도 통일농업의 방향성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유기농업 육성을 제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북한 문헌에 나타난 유기농업에 관한 담론 구조의 진화

처음부터 북한의 유기농법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농업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순환적 생산방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경제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는 화학비료와 영농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쌀과 옥수수의 생산이 부족해져 그것을 보충할 감자의 증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기농법적 방식이 단편적으로 고안되었다.

김정일은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고기문제도 풀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농장 안에 돼지공장을 건설하여 감자를 가공하고 나오는 찌꺼기로 돼지를 사육하고, 돼지를 기르면서 나온 물거름을 다시 감자농사에 쓰는 ‘순환적’ 생산방식을 의미했다. 초창기에는 이것이 바로 대흥단식 감자농법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김정

20) 위의 글, 137쪽.

일은 대흥단군의 감자농사 현지 지도에서 “이제 대흥단군에서는 감자를 가지고 돼지를 길러 돼지 부자가 되며 흰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감자에 돼지고깃국을 먹게 만들어야 한다”²¹⁾고 언급하면서 대흥단군 종합농장의 매 분장마다 돼지공장을 하나씩 지어 돼지와 감자가 연관된 순환생산 구조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것은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가 주민들의 식생활 구조의 변화까지 동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최근에 조선로동당에서 발간한 경제이론 해설서 역시 “현대의 감자농사는 반드시 축산과 배합하여야 한다”²²⁾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감자증산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생산방식의 축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했다.

이어 양어 분야가 축산업과 연계되었다. 2000년 5월의 담화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할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풀과 고기를 바꾸라고 했듯이 자신은 “풀과 고기를 바꿀 뿐 아니라 강냉이와 물고기를 바꾸어야 합니다”²³⁾라고 강조하면서 양어업을 발전시켜 인민의 식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01년에 양어법을²⁴⁾ 개정하여 양어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공 양어 수역보다는 하천, 호수, 저수지, 물웅덩이, 관개용 물길 등과 같은 자연 수역을 이용한 양어사업이 입지조건이 유리한 각 농장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김정일은 곡

21)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141쪽.

22)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142쪽.

23) 김정일,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53쪽.

24) 양어법은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호로 처음 채택되었다.

물과 물고기를 바꾼다고 했지만 곡물사료의 부족으로 대체사료로 개발된 미생물 번식에 가축 배설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어장은 농장 안에 조성되었다. 농장의 양어장에서 길러진 물고기는 탁아소, 유치원, 농장원 세대에 공급되었다.

양어업에서 ‘동물성 먹이’의 확보는 양어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북한 당국은 동물성 먹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업에서 찾았다. 『로동신문』(2005.7.26)은 메기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먹이문제를 ‘우리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메기공장이 위치한 시·군의 농목장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 즉 가축의 배설물을 메기공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민주조선』(2005.12.16) 역시 황해남도 청단군 갈산협동농장의 양어장(10개) 사례를 들며 양어장 주변에 농장의 비육 분조를 비롯한 축산시설을 배치하여 가축 배설물로 물고기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가축 배설물은 양어의 먹이가 되는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데 중요한 원료가 된다.

북한의 대표적인 축산전문협동농장의 하나인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2006년 8월에 양어장 준공식을 진행하였는데, 무려 6정보 면적에 양어못 35개를 조성하였다. 은정 양어장은 축산업과 양어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표적인 모델이다. 송화메기공장 역시 축산과 연계하여 메기를 생산하고 있다.²⁵⁾ 양어업은 1998년 12월에 채택된 양어법 제44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수역에서 미생물 번식에 리용할 수 있도록 집짐승 배설물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애초부터 축산업과 연계해 계획한 것은 사

25) 『로동신문』, 2006년 7월 31일.

실이지만 두 부문의 연계가 현실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이다. 새로운 방향의 축산업이 발전하면서 물고기 먹이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농업은 감자+축산+양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순환적 생산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순환적 농업생산 구조가 처음부터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1990년대 후반에는 축산, 양어, 감자농사 부문이 각각 개별적인 증산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세 부문이 상호 연계적인 생산구조로 발전했다. 순환적 농업생산 구조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확대 및 주식의 다종화 방향으로 식생활 구조를 개선하고, 화학비료의 부족 및 심각한 토지의 산성화 등과 같은 취약한 영농 조건하에서 가능한 대체 생산방식을 고안한 데서 형성되었다.

순환적 농업생산 구조의 강조는 단순히 증산 차원을 넘어 식생활 구조의 전환과 연계되며 정책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오랫동안 다각적 영농이 제한되고 벼과 옥수수 중심의 작부체계는 주민들의 식생활 구조를 주식 위주로 바꾸어놓았다. 경지의 대부분이 벼와 옥수수 재배에 돌려졌기 때문에 부식물 생산과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 불균형적인 식생활 구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 소비를 줄이고 부식물 소비를 늘리는 식생활 구조의 개선이 필요했다.²⁶⁾ 김일성 시대에 이상적인 식생활로서 ‘흰쌀밥에 고깃국’이 지향되었다면, 김정일 시대는 ‘고깃국에 흰쌀밥’을 지향했다. 따라서 1990

26) 물론 충분한 주식 섭취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의 소비를 줄이고 부식물의 소비를 늘리자는 것이 북한 정권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농정에서 감자 증산과 축산 및 양어 기지 건설이 강조되고 김정일이 이 분야의 현지 지도를 자주 했던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년대 말부터 2000년대 최근까지 북한 당국이 농업 부문에서 주력하고 있는 닭·오리공장, 염소목장, 돼지공장, 메기 양식장 등의 신설 또는 개건 현대화 사업, 그리고 감자농사의 확대는 바로 식량문제 해결과 함께 식생활 구조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1996년 4월 당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이 농업생산 구조의 개선을 언급한 이후 ‘집짐승(초식 가축) 중심의 축산업과 메기, 잉어, 송어 등 민물고기 중심의 양어사업이 전국적인 균등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식생활 구조의 개선은 기존의 쌀과 옥수수 중심의 주식 구성에서 감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다종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에는 쌀과 옥수수가 주식물이었다면 이제는 쌀과 옥수수와 함께 감자를 제3의 주식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함경도와 같은 고산지대와 내륙지대는 기후와 토지의 조건상 쌀과 옥수수를 많이 생산할 수 없다. 반면 감자는 내한성과 내병성이 강하여 위의 지역에서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감자의 증산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감자가 제3의 주식원으로 주목을 받게 된 데는 화학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토지의 산성화가 매우 심각한 영농환경적 요인들도 크게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감자는 벼나 옥수수보다 비료의 소비량이 적으면서도 단위당 수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를 주식원으로 하는 감자 증산은 식생활 구조와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였다.²⁷⁾

27) 이상에서 서술된 북한의 순환적 농업생산 구조에 대한 글은 정은미, “대북식량 자원의 사회적 분배효과와 ‘순환적’ 농업생산구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정책을 내놓은 것은 2003년 5월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서이다. 하지만 이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유기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유기농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 담화에서는 지금까지 농촌에서 주로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온 실태를 지적하면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부침땅이 산성화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유기농업의 추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²⁸⁾라며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국정운영의 방향에서 유기농업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0년 신년 공동사설 “우리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에서이다. 이 사설에서 2010년을 “경공업과 농업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천적 방법의 하나로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유기농법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은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이 사설에서는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

논문집』, 제12호(2009), 120~137쪽을 발췌한 것이다.

28) 김정일,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415쪽.

선”이라며 농업 생산에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 고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설은 농업 생산을 올리기 위한 실천적 방침으로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 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유기농법은 유기산업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포함되어 언급되곤 하였다.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유기산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헌은 경제 관련 전문학술지 『경제연구』(2011년 1호)에 실린 리영일의 논문에서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유기산업법은 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96호로 채택되었다. 이 법의 전문은 제5장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기산업법의 목적을 “유기제품의 생산과 품질인증,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산업에 대한 정의를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같은 것을 거의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유익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경제 부문”(제2조)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유기산업은 유기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친환경 제품 생산을 포괄한다. 하지만 위의 리영일 논문에서 “사회주의 유기산업의 발전이 경제강국 건설을 물질경제적으로 담보하게 하자면 우선 나라의 식량문제, 인민들의 먹는 문제부터 푸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 생산이며 알곡 생산을 늘여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초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²⁹⁾라고 언급되어 있듯이 유기산업법의 현실적 적용은 농업 분야, 특히 식량문

제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논문에서도 유기산업의 발전이 실제로는 식량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리학의 논문은 비료와 영농자재의 생산 및 수송원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의한 흉작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 농경지의 사막화 촉진, 그리고 식량가격의 상승 등과 같은 환경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녹색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을 제시한다. 우선 논문은 북한에서 녹색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단백질 문제를 해결하며 특히 식량문제를 푸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어 논문은 “알곡 위주의 식생활 양식을 고칠 수 있게 단백질 식품문제를 풀게 되면 식량문제를 푸는 데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로부터 녹색식품의 개발과 리용문제는 우리나라 유기산업발전의 중요 요구로 나선다”³⁰⁾라고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논문은 녹색상품의 개발과 이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첫째 “그것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그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데 적극 이바지한다는 것”³¹⁾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요인으로는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이어 여기서 순환경제란 자원을 반복 이용하는 경제로, 다시 말해 생산과 폐설물의 종합적 이용을 결합시킨 경제체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

29) 리영일,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유기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2011), 29쪽.

30) 손리학, “녹색식품을 개발리용하여 유기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4호(2009), 32쪽.

31) 리성길, “녹색상품의 개발과 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제2호(2012), 37쪽.

와 개발 비용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녹색혁명의 명목하에 막대한 양의 알곡을 생물 원료로 전환시켜,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도상국가들을 통제하는 무기로 식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또한 북한 당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녹색상품의 개발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알곡작물로 생물 에너지를 개발하는 대신에 비알곡작물로 생물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문헌에서 언급되는 순환생산 또는 순환경제 용어는 쿠바의 유기농업 특징 중 하나인 지역 내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농법을 떠올리게 한다. 쿠바의 경우, 교외의 축산 농가에서는 도시의 레스토랑, 호텔, 학교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공 처리하는 등 도시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이 모두 농사에 재이용된다. 분뇨도 간단한 메탄가스 발효장치에 의해 에너지로 활용되는 등 지역 내 자원이 재활용되고 있다.³²⁾

마지막으로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 당국은 또다시 유기농업을 언급함으로써 2010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유기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사설에서는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하면서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제와 우리식의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업생산 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들을 수요대로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기존과 달리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우리식의 유기농법’이라는 수식어구가 붙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다. 이후 사회과학

32) 요시다 타로(吉田太郎), “유기농업으로 나라가 변한다,” 107~136쪽.

관련 북한의 공간 문헌에는 종종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나 유기농법에 대한 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5월에 발간된 『사회과학원학보』에 실린 리민재의 논문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는 서로 련관되는 생산공정, 부문들의 생산물이나 부산물, 지어 폐설물까지도 원료, 자재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생산체계”³³⁾라고 하며, 이러한 생산체계의 장점으로 첫째,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의 생산기반으로 증산할 수 있어 좀 더 큰 실리(수익)를 낼 수 있다는 점, 둘째,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자원의 재활용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자연생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고 훌륭한 생활환경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첫 번째 장점의 실례로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고리형 순환생산체계하에서 축산 부문은 조성되는 유기질 원천으로 농산 부문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게 하며 농산 부문은 축산 부문에 필요한 사료를 좀 더 늦게 넉넉히 생산 보장할 수 있게 하여 총체적으로 추가적인 투자 없이 같은 생산 조건에서 농산과 축산을 다 같이 빨리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³⁴⁾고 설명한다. 이처럼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는 단순히 농업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축산업 부문을 포함한 전체 산업 부문에서 자원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적인 생산방식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리형 순환생산체계가 오랜 경제

33) 리민재,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와 그의 사회경제적 의의,”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12), 44쪽.

34) 위의 글, 44쪽.

봉쇄로부터 부족해진 경제 자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요법으로 제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 토대에 기초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며 자원 위기와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다 같이 보장한다는 데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의 확립이 갖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의의가 있다”³⁵⁾고 언급한 것은 현시점에서 세계 인류사회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의식을 북한 역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언급된 ‘우리식의 유기농법’이란 무엇일까? 2012년 4월에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8권 제2호에 실린 김광길의 논문 “유기농업의 정보화의 기본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에서 ‘우리식의 유기농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나라마다 경제관리체제와 농업관리체제가 다르고 유기농업이 진행되는 환경과 구체적 조건과 방법이 다르며 유기농업 생산과 관리에 정보기술 수단을 적용하는 목적과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³⁶⁾며 유기농업정보체계의 프로그램을 “우리식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우리식의 유기농업발전과 유기농업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서 관건적 문제”³⁷⁾라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농업 증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작하여 유기산업법의 제정과 같은 제도화 수준까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북한의 유기농법 정책에 대한 구상과 체계가 구체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2000년대 이전

35) 위의 글, 45쪽.

36) 김광길, “유기농업의 정보화의 기본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8권 제2호(2012), 124쪽.

37) 위의 글, 127쪽.

에는 화학비료를 비롯하여 영농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쌀과 옥수수의 부족을 메워줄 감자의 증산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재래식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순환적’ 생산방식이 고안되었고 그것이 다시 식생활 구조의 혁명과 연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업 증산과 생태환경의 보존 문제의 동시 해결이라는 논리 구조로 진화했다.

4. 북한 유기농업의 실태와 한계

북한 정권이 유기농법에 관심을 갖던 초창기에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농비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유기산업법이 제정되고 농업이 ‘주공전선’으로 선언되었던 2005년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과학원에서 미량원소 복합비료를 연구·완성했다”며 “이 비료는 붕소·아연·구리 등 필수 미량원소를 보충해줌으로써 식물의 활성을 높여주고, 광합성과 영양물질 합성 등 물질대사 과정에 원만히 진행되게 한다”고 소개하며, 이와 함께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지 주민들은 농사에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이탄 캐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탄은 늪지 등에 서식하던 갈대류나 이끼류의 식물이 죽은 뒤 땅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남은 부분으로 형성된 것으로 비료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은 비료뿐 아니라 화학공법이 아닌 친환경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농약도 자체 개발하였다고 전했다. 과학원 합흥분원 유기화학연구소가 개발한 이 새 농약은 특히 콩과 과수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은 소개하고 있으며, 또 생물분원 과학자들이 개발한 식물성 농약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표 1> 경제 위기 이전과 1998년도의 농업동력 비교

구분	위기 이전			1998년		
	가용량	사용 메가와트	비율 (%)	가용량	사용 메가와트	비율 (%)
사람	3.4백만	254	9	4.4백만	328	27
축력	80만 마리(소)	418	14	80만마리(소)	418	35
트랙터	70만 대	1,947	67	20만대	418	35
기타 기계	8만 (소엔진모터)	284	10	2만 (소엔진모터)	44	3
합계		2,902	100		1,209	100

자료: Daud Kahn, “북한 농업 허부구조 복구 및 개발 방안”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2000.11.1), 64쪽.

병충해의 피해를 입지 않게 했으며 소출도 18~20% 증가하게 했다고 전했다.³⁸⁾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진영으로부터 화학비료나 농약, 비닐, 농기계의 연료와 부품 등 중요한 농자재의 수입이 크게 줄면서 불가피하게 북한의 농업은 <표 1>에 나타나듯이 기존의 관행농업이 크게 후퇴하고 전통적인 재래식 영농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주요 농업동력은 트랙터로 전체 동력의 6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사람과 축력의 의존도는 각각 9%, 14%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98년에는 트랙터의 비중은 35%로 크게 감소하고, 그 대신 사람과 축력의 비중이 각각 27%, 35%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기계를 대신하여 사람과 축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신에 가축 배설물이나 인분 등을 이용한 거름이나

38) 『연합뉴스』, 2005년 7월 6일.

퇴비와 같은 자급비료의 사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영농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공간 문헌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비료와 연유, 비닐박막들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족되는 량을 어떻게 자체로 해결한단 말인가.) 생각다못해 그는 다음날 진거름 달구지를 끌고 20여 리 떨어진 읍에까지 갔다 왔다. 그날 저녁 그는 작업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비료는 자체로 해결합시다. 읍에서 진거름만 다 날라와도 상당할 것 같소. 세대당 계획된 퇴비도 무조건 생산하게 하고 …… 자급비료 반출엔 연유가 부족한 만큼 트락또르 대신 달구지와 손수레들을 총동원시킵시다. 웬만한 소에는 모두 보습을 메워 논밭에 내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모두가 삼을 들고 펼쳐나섭시다.”(중략)

인호는 이삭비료를 얻으려 군은 물론 도농촌경리위원회나 농업위원회까지 뛰어다녔다.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만나 사정을 하였지만 찾아가는 사람마다 몹시 딱해하며 빈 손바닥을 내보일 뿐이었다. 하긴 그들이라고 사정이 다를 리는 없었다.³⁹⁾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 농촌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관행농업 방식을 버리고 전통적인 재래식 농경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회귀한 농경 방식은 장기화된 경제 침체 속에서 북한 농촌에서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농경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에 유기농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39) 김혜영, “영원한 노을,” 『조선문학』, 제4호(2004), 36쪽.

유기농법에 대한 북한의 초기적 관심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방법의 유기비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외부 세계의 유기농업의 기술에 관심을 갖으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갔다. 전 농림부 장관 출신인 김성훈 교수의 전언에 의하면, 그가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초청으로 밴쿠버에 머물고 있던 2002~2003년에 북한 농업과학원 및 평양 농과대학 대표 일행 4명이 UBC의 초청으로 캐나다의 유기농법을 연수했다. 그리고 김 장관이 캐나다에서 만난 북한 농학자와 농업 부문 고위 관료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조달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북한 농업을 친환경 농법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한다.⁴⁰⁾

하지만 외부 세계로부터 유기농법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려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민간단체 한스 자이델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의 웹 소식지에 따르면, 2011년 5월, 한스 자이델 재단의 대표단은 북한의 나선시에 있는 동물 육종농장(나선시 청계농장)과 곡식농장(선봉시 운성농장) 두 곳을 방문했는데, 특히 농장 대표자들에게 농업전문학교를 통해 유기농 농업훈련을 수행하는 데 동의했다. 이 재단의 소식지는 북한에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해충제의 부족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재단이 유기농업에 관련된 과학 교과서 업무를 평양에서 수행했다고 전했다.⁴¹⁾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첫해인 2012년에는 유기농

40) 김성훈, “식량난 북한, 환경난 남한, 쿠바 유기농업 벤치마킹 하라,” 『신동아』, 통권 542호(2004년 11월호), 474~482쪽.

41) <http://www.hss.or.kr/A1286Korean.html>

과 관련된 외부의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2년 1월 신년 공동사실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유기농의 적극적인 도입이 언급된 직후 북한 과학원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기농법 안내서’ 수천 권을 제작해 평양 인민학습당과 김일성대학 등의 농업 관련 학과와 각 도의 협동농장에 비치했다. 이 최초의 유기농법 안내서는 유럽의 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인쇄된 것이다.⁴²⁾ 유기농법 안내서의 인쇄를 담당했던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최근 북한 당국이 유기농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 밖에도 독일의 유기농연구소는 북한 농업지도자들에게 친환경 농법을 교육하는 협동연구농장을 평양 인근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유기농연구소의 비아 테 후버(Vias Te Hoover) 대변인은 “유럽연합에서 약 50만 유로를 지원받아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 계획으로 농업지도자 20여 명에게 유기농 전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어 후버 대변인은 “유기농연구소에는 독일에서 파견된 연구원 5명이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의 유기조사연구원과 함께 약 30헥타르 규모의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⁴³⁾ 이처럼 북한 당국이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 대해 외부 세계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화학비료 부족과 토양의 산성화 등의 제약 속에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분석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유기농업 실태가 집단농업 부문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한 축으로 북한 인민에 의해 자발

42) 『노컷뉴스』, 2012년 1월 12일.

43) 『노컷뉴스』, 2012년 11월 7일.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308305>.

적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농업 부문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심지어 북한 문헌을 통해 북한의 도시 외곽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개인농(또는 가족농) — 그것이 불법적 경작이든 합법적 경작이든 상관없이 — 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텃밭이나 소토지와 같은 경지가 개인농 또는 가족농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농의 경우 사실상 유기농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화학비료 대신 인분이나 가축 배설물을 이용한 거름 또는 두엄 등이 주로 사용되며 틈틈이 김매기, 제초 작업, 해충 제거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유기농법을 기반으로 한 개인 텃밭의 경작은 오랫동안 집단농장과 공존해온 북한 인민들에게 꽤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발간되지 않는 농근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농업근로자』에는 1960년대 중반 농촌의 텃밭 경작 현황을 자세히 묘사한 기사가 실려 눈길을 끈다.

룡강군 오신희동농장 제7작업반 김윤희농근맹원네 집에서는 마당 한 쪽으로는 남새를 심고 집 뒤와 집 옆에는 포도나무, 살구나무 등 과일나무들을 보기 좋게 심어 놓았다. 텃밭에는 배추, 무우, 쥐무우, 파봄 파와 가을 파), 근대, 부루, 마늘(풋마늘과 김장용 마늘), 오이, 고추, 호박, 박 그밖에 완두콩, 줄당콩, 올감자, 사탕수수 등 열다섯 가지를 심고 잘 가꾸고 있다. 좁은 뜰 안에는 시금치를 심어 먹은 후에 배추를 심었고 그 뒤그루도 고추를 심었다는 것이다. 김윤희 농근맹원의 말에 의하면 온 가족이 아침 일찍기 일어나 오줌을 물에 타서 덧거름을 주는 일, 김매기와 씨숙음, 벌레잡이를 하는데 이제는 아예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꾸는 남새를 가지고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팔구지 않

고 푸짐이 먹는다고 한다.⁴⁴⁾

위의 인용문에 묘사된 것처럼 농가에 딸린 텃밭은 유기농법에 의해 경작되며 부식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한 생산성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텃밭은 일반적으로 이모작 또는 삼모작의 형태로 경작되는데, 주로 옥수수과 감자와 같은 알곡 작물이 함께 재배되고 추수 후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가 심어진다. 이외에 콩(두부용)과 강낭콩, 가지, 호박, 파 등 다양한 채소류를 함께 심으며, 특히 고추와 마늘은 환금성이 높아 대체로 시장 판매용으로 심는다. 연구자가 심층 면접한 농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텃밭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양은 텃밭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면적 대비 집단농장의 경우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쿠바의 유기농업 경험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유기농업 정책은 단순히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앞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쿠바와 북한이 공통적으로 대외적 고립과 수입 영농자재의 부족과 같은 유사한 상황적 제약 속에 유기농업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쿠바가 식량자급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유기농업으로의 영농기술적 전환에만 국한하지 않고 집단농업체제의 근본적 개편과 농산물 유통시장의 개혁 등을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북한은 집단농업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유기농법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44) 『농업근로자』, 1966년 7월 5일.

5. 나오며: 대안과 정책적 시사점

사실상 북한의 농업체계는 오랫동안 근대적 관행농업과 가족농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이 공존해왔다. 전자는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에서, 후자는 농촌과 도시의 가구에 합법적으로 배정된 텃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공존은 북한에서만 발견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행농업은 “불편하지만 전통적 농경 행위들과 동거”해왔다.⁴⁵⁾ 유엔의 식량농업 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에 의하면, 2012~2013년 북한의 식량 작물 총 식부면적은 총 202만 5,000헥타르로 추정되는데 개인과 기관이 보유한 텃밭 2만 5,000헥타르와 경사도 15°를 넘는 산지에 조성된 비탈밭 약 55만 헥타르가 포함된다. 협동농장의 농가는 최대 30평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는데 약 170만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텃밭은 1만 7,000헥타르에 이른다. 또 430만에 달하는 도시 거주자들도 가구당 5~10평 정도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⁴⁶⁾

북한의 텃밭과 비탈밭에서는 대체로 가족농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의 농경이 이루어진다. 식량 사정이 좋았던 시기에는 주로 부식물의 해결을 위한 주요 원천이었고, 199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대규모 식량위기 시기에 텃밭과 비탈밭은 식량위기로부터 살아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텃밭의 생산성이 국영농장 또는 협동농장과 같은 집단농장의 생산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쿠바의

45) *The Economist*, March 25, 2003.

46) 김영훈, “북한의 식량사정 및 농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2013), 38~39쪽.

사례처럼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은 없었지만 이미 북한은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유기농법에 의거한 가족농이 십수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본 쿠바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무비료’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환경의 지속적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 생태문제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인류문명 발달사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자원의 지역 내 순환과 생산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생태계의 지속성과 농업 생산성의 지속성, 그리고 생활양식의 전환을 동시에 이룬 “늘 푸른 농업혁명”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 농업의 미래 비전으로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⁴⁷⁾ 쿠바의 경험은 생태학적 농업 기술에 바탕을 둔 중·소형 농장들로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자급적인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⁴⁸⁾ 이러한 대안 농업은 쿠바의 경험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식량위기와 경제붕쇄에 직면한 북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신년 공동사설에서 유기농법을 거론한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유기농법이 중요한 농업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강조되고 있는 북한의 유기농업 정책에는 두 가지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이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47) 요시다 타로(吉田太郎),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작은 나라 쿠바의 커다란 도전, ‘늘 푸른 혁명’』, 6~7쪽.

48) 프레드 맥도프(FredMagdoff)·존 포스터(John Bellamy Foster)·프레드릭 버텔(Frederick H. Buttel), 『이윤에 굶주린 자들』, 320쪽.

의 경제제재가 쉽게 해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비용·고투입의 관행 농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쿠바의 사례와 같이 유기농법이 북한에서도 농업 생산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남한 정부로부터 받았던 대규모의 화학비료나 영농자재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또한 그동안 농업교류협력에 적극적이었던 남한의 민간단체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농업 환경에서 유기농법의 강조는 북한 인민이 농업 생산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력갱생의 구호를 관철하는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북한이 유기농업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에 추진되어온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을 성찰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남북한 간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교류협력의 방향은 주로 생산적 효율성에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식량위기 이전까지 고수해오던 화학화와 기계화를 기반으로 한 고도로 집약화된 관행농법의 복원이나 남한 관행농법의 선진영농기술과 자원의 이전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지난 시기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되고 진행된 농업교류협력 사업에서 한반도의 환경생태계를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과 같은 통일된 한반도의 농업공동체의 상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정부 당국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왔던 민간 차원의 농업교류협력 역시 쌍방향적 교류협력보다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남한의 물자와 기술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내용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모작(두벌농사) 확대,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등과 같이 북한의 농업정책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남북 농업교류협력에는 통일될 한반도의 농업 공동체의 비전, 목표, 방향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식대로 남북한이 농업교류협력을 지속한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립적인 농업 생산능력이 복원될 수 있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내외의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은 중단될 수 있고 그렇다면 북한의 자립적인 농업 생산능력의 복구는 북한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남한의 농업은 21세기 인류 문명사회의 공통 화두인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보전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은 20세기 개발 산업화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만일 향후 추진될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통일 한반도의 농업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통일 한반도의 농업공동체가 생태질서를 파괴하고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며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존과 같은 비평화적인 녹색혁명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은 전체 한반도 차원에서 농촌과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인간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일농업의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북한 정권이 관심을 보이는 유기농업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남한은 유기농업 분야에서 북한에 비해 월등히 발전된 영농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유기농업이 최종적인 통일농업의 대안적 모델이 될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유기농업

분야의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식량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평화와 생태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는 한반도의 식량주권 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동시에 고민하고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접수: 2월 28일 / 수정: 3월 27일 / 채택: 3월 29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 논문

김광길, “유기농업의 정보화의 기본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8권 제2호(2012).

김정일,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_____,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김혜영, “영원한 노을,” 『조선문학』, 제4호(2004).

리민재, “고리형 순환생산체제와 그의 사회경제적 의의,” 『사회과학원학보』, 제2호(2012).

리성길, “록색식품의 개발과 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제2호(2012).

리영일,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유기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호(2011).

손리학, “록색식품을 개발리용하여 유기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4호(2009).

3) 신문

『로동신문』, 2006년 7월 31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완배 외, 『통일한국의 농업: 통일 이후 남북한 농산물의 통합생산 방안』(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데스마레이즈, 아네트 아우렐리(Annette Aurelie Desmarais), 『비아캄페시나: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대구: 한티재, 2007).

맥도프(Fred Magdoff)·포스터(John Bellamy Foster)·버텔(Frederick H. Buttel), 『이윤에 굶주린 자들』(서울: 울력, 2011).

임상철·강동원, 『‘통일농업’ 해법찾기』(서울: bookXpress, 2008).

최정남 외, 『통일농업 성장보고서 1991~2009: 남북농업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방향』(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타로, 요시다(吉田太郎),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작은 나라 쿠바의 커다란 도전, ‘늘 푸른 혁명’』(과주: 들녘, 2004).

2) 논문

권영근, “식량 위기에 얽힌 진실과 대안,” 『환경과생명』, 통권 59호(2009, 봄호).
김성훈, “식량난 북한, 환경난 남한, 쿠바 유기농업 벤치마킹 하라,” 『신동아』, 통권 542호(2004년 11월호).

_____, “쿠바는 어떻게 식량위기를 벗어났나?: 쿠바의 유기농업 성공이 북한에 주는 교훈,” 제7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2004.8.19).

김연철, “집권적 농업체제의 개혁: 쿠바의 농업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2호(2002).

김영훈, “북한의 식량사정 및 농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2013).

송원규·윤병선,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 위기-대안의 모색: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농촌사회』, 제22집 1호(2012).

스테판 쥬니스(Stephen Zunes), “쿠바는 녹색국가가 되는가,” 『녹색평론』, 제67호(2002).

장경호, “식량안보인가, 식량주권인가?,” 『민중의 소리』, 2012년 11월 1일.

정은미, “대북식량자원의 사회적 분배효과와 ‘순환적’ 농업생산구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12호(2009).

타로, 요시다(吉田太郎), “유기농업으로 나라가 변한다.” 『녹색평론』, 제67호(2002).

Daud Kahn, “북한 농업 하부구조 복구 및 개발 방안.”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2000년 11월 1일).

Eduardo Francisco Freyre Roach, “쿠바의 유기농업과 한국에서의 적용.” 2012년 한국유기농업학회 국제심포지엄, 『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전망』(2012.10).

3) 기타 자료

『노컷뉴스』, 2012년 11월 7일, 2012년 1월 12일.

『민중의 소리』, 2012년 11월 1일.

『연합뉴스』, 2005년 7월 6일.

<http://www.nyeleni.org/spip.php?article333>.

<http://www.hss.or.kr/A1286Korean.html>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308305>.

3. 국외 자료

Rosset, Peter, “Food Sovereignty: Global Rallying Cry of Farmer Movements,”
Backgrounder, Vol. 9, No. 4(Fall, 2003).

The Economist, March 25, 2003.

The North Korean Organic Farming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overeignty

Jeong, Eunmee(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organic farming which has been often mentioned in the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In comparison with the experience of organic farming in Cuba, Cuba and North Korea have in common with paying attention to organic farming when there is a lack of imported farming materials and foreign isolation. On the other hand, unlike Cuba, North Korea has not solved the food problem because they are likely to introduce organic farming only in terms of technical aspects while maintaining collective agriculture. However,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organic farming based on family farming in both rural and urban areas voluntarily has been practiced in order to overcome the lack of food for several decades.

The discourse on organic farming has evolved the enactment of

organic industry law and ecological conservation from a means for increasing production. Also, North Korean regime's early interests in organic farming concentrated on developing the organic fertilizers to substitute insufficient chemical fertilizers on its own. Since the 2000s, however, North Korea has broadened its interests into organic farming technology of the outside world.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end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gricultural policy of the North and limited to transfer of resources and farming technology of custom farming of the South based on chemistrization and mechanization.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needs to ensure food sovereignty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hile seeking alternative joint agricultural model that is able to recover the health of agriculture and ecology. Therefore, organic farming that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interested in will becom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Keywords: organic farming, custom farming,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food sovereignty, ecology, family farming, joint agriculture